

## 민주당 광주·전남 공천 대혼란

### 광주 동구 선거인단 모집 투신자살 사건 후폭풍

진상조사 결과 따라 경선방식 변경 가능성도

광주선관위, 박주선·유태명 등 3명 수사 의뢰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투신 자살'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광주 동구의 선거인단 모집과 공천 심사가 중단되고, 선거인단 대리 등록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광주·전남 일부 지역구에 대한 민주통합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 면접 등 공천심사 일정 지연도 불가피한 전망이다.

특히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구 예비후보자 자격 박탈, 경선 방식 변경 등도 배제할 수 없어 광주·전남 경선 구도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투신 사건' 집중 조사=민주통합당은 27일 4·11 총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한 광주 동구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중단하고 진상파악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정장선 선거관리위원회를 단장으로 한 6명의 진상 조사단을 구성해 '투신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중앙당 실무진으로 구성된 1차 진상조사단은 이날 광주에 내려와 사건 연루 의혹 인물 등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벌이는 등 '불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사결과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광주 동구 후보 경선이 국민경선으로 그대로 진행될지, 다른 방식으로 전환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선관위도 전날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한 동구 경선 선거인단 모

집 과정에 대한 불법성 및 배후 여부를 밝히기 위해 박주선 예비후보와 유태명 동구청장 등 3명을 광주지방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광주시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곧바로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민족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단호 대처=민주통합당은 선거인단 대리 모집 및 등록 등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서 광주 동구 '투신 자살 사건'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심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 대표는 이어 "당은 선거인단 접수를 본인이 직접 하도록 했다"며 "불법 선거가 적발되면 경선 중단 및 후보자 자격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선거인단 대리 등록에 강력히 대응하고 나선 것은 '공천 혁명'으로 내세웠던 '국민경선 선거인단 제도'가 '투신 자살'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져나온 만큼 사건의 과장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자발적 참여 비율이 낮은데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지역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설상 '동원선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는 당 차원

/임동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통합당 동구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투신 자살' 사건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진상조사단인 김태균 국제국장(오른쪽)과 조영민 부장이 광주 북구 유통 광주시당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동구 계립동 현장서 압수한 동원선거 증거품은

### 선물목록·관광 계획서·송금통장까지

지난 27일 선관위 단속과정에서 60대 전 동장의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한 광주 동구 계립1동 주민자치센터 4층 꿈나무 도서관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선관위가 이 도서관에서 압수한 70여 건의 증거자료 중 대부분이 불법 선거의 전형인 '동원·관권·금권선거'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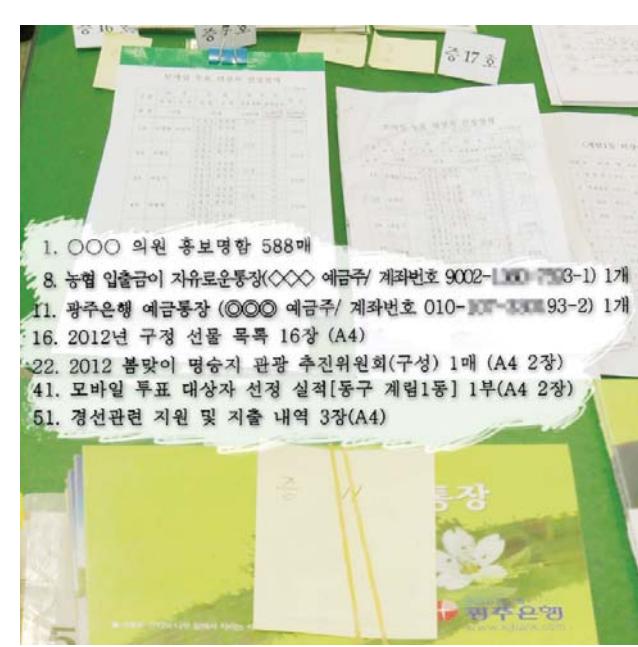
따라서 선관위는 이것이 특정 예비후보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 사무실'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관련기사 3면)

선관위가 압수한 증거자료 중에는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세대명부(거주자)'와 동 단위 단체장과 주민들의 이름이 적힌 명찰·선물 목록, 통장 9개 등이 포함해 관권선거는 물론 금품 선거 의혹도 일고 있다.

또한, 4명씩 6개 조로 나뉘어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 실적'을 표기한 자료와 ▲선거인단 모집 조직 ▲계립1동 협의회 조직 책임자 현황 ▲계립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명부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정방법 안내서 등이 무더기로 발觋됐다. '불맞이 명승지 관광 주간' 등이 부여되면서 선거인단 모집 단속 과정에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공도서관이 특정 예비후보의 사조직에 의한 선거인단 모집의 '전진 기지' 역할



광주시선관위가 지난 27일 광주 동구 계립1동 주민자치센터 4층 꿈나무도서관에서 압수한 선거인단 모집 실적 자료와 통장, 주요 증거물을 수거 목록.

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금품선거를 의심할 만한 증거자료도 다수 확보됐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명절과 생일에 견낸 현금과 흙어 세트, 별자, 인삼 등 각종 선물 목록과 함께 어떤 용도로 지원됐는지 모를 '지원 및 지원내용' 서류에는 모임 주선자 명단과 금액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특히 선물 목록과 지출 내용에는 '청장', '지사'

에 의해 지원', '의원님 참여 격려', '의원님 참석 희망', '잔액은 위원회 회원 경선 마무리 식사 할 계획' 등 조직적인 지시를 암시하는 단어와 문장이 많았고, 특정 예비후보의 명함과 의정보고서가 무더기로 발견됨에 따라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개입 여부도 핵심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구청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뤄지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포함된 점, 압수한 증거자료로 보아 도서관이 특정 후보를 위한 사조직 사무실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주선 예비후보 측은 선관위의 불법 선거인단 모집 단속 과정에서 조모씨가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가슴 깊이 위로를 드린다"며 애도를 표한 뒤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하나 없고, 선관위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법 또는 부정이 연루됐다면 사법처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알림



### 봄으로의 질주 이틀 남았습니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하프·10km·5km 월드컵경기장  
풀 코스는 문화전당 앞에서 출발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 '구곡담' 결국 없어졌다

국회 '300석 증설안' 의결...주민·예비후보들 반발

담양·곡성·구례 선거구가 폐지돼 인근 지역으로 분산 편입되고 국회의원 의석수는 246석에서 300석으로 늘어났다. 여야가 선거구 확장을 놓고 치열한 정치공방을 벌인 끝에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결국은 '밥그릇 쟁기'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국회는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갑과 을로 나누고 세종 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신설해 총 3개 지역구가 늘어나고 영·호남에 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는 담양군·곡성군·구례군 선거구가 가운데 담양군은 함평군·영광군·장성군, 곡성군은 순천시, 구례군은 광양시에 편입되며 경남 해운대구·하동군 선거구는 인근 경남 사천시에 합쳐진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는 246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위원 소자를 없애기 위해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구에 대한 경계도 조정했다.

하지만, 이처럼 국회가 뒤늦게 선거구를 확정함에 따라 조정된 지역구의 예비후보들과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정치적·정서적 혼란은 물론 상당수의 후보는 경제적 피해까지 떠안게 됐다.

이날까지 국회를 오가며 농어촌 지역 폐지 반대 시위를 벌여온 담양·곡성·구례의 한 예비후보는 이날 "도시지역을 합구하라는 선거구 확정에의 제안을 거부하고 농어촌지역구를 없앤 것은 또 하나의 농어촌 차별정책"이라며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와서 선거구를 합쳐서 국회의원을 뽑으라는 것은 선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른 후보는 "그동안 경선을 준비하면서 3개군을 공략하느라 적지 않은 자금이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선거구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원내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추세라면 (향후) 농촌 지역구는 더욱 줄어들고,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배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선거구 확정 합의

\*지역구 246석(이전 245석)+비례대표 54석(현행 유지)=총 300석(이전 299석) 합의

분할 합의지역 (3석 증가)

통·폐합 대상지역 (2석 감소)



거구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원내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추세라면 (향후) 농촌 지역구는 더욱 줄어들고,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배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노무현정부 최장수장관



서구 갑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2  
민주통합당  
DEMOCRATIC UNITED PARTY

### 장하진

후원회

광주출생  
전남여중·고/이화여대 졸업  
노무현정부 여성가족부장관(전)  
전남대학교 교환교수(전)  
KBS 객원논설위원(전)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장(전)  
노무현재단 운영위원(현)

후원회장 정덕원(재단법인 추선장학회 이사장)

- 후원회 계좌번호: 광주은행 105-121-704095 · 예금주: 장하진후원회(최예슬)
- 사무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166-10 룬정빌딩 2층 TEL: 062-365-6606~9 FAX: 062-365-6610

이 신문광고는 정치자금법 15조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것입니다.